

## 정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“해양 사고 현장 대응 체계 10년 지나도 ‘우왕좌왕’”(부산일보, 4.15.) 보도 관련

### < 보도 주요 내용 >

-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,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

### < 설명 내용 >

-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.
  -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행안부)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-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,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,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
-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·감독하고 있습니다.
  -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(면허·정책)와 해양경찰청(안전운항 관리)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,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(‘14.11)하였고,

-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'15년 4월부터 **해사 안전감독관 제도**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(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소속)에 대해 **지도·감독**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윤진 (044-200-5738)
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승찬 (044-200-5857)

